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 업무처리 예규안

### 1. 제정이유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게 되는 민사단독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가. 민사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항소 및 항고사건을 고등법원 관할사건으로 함(다만, 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안 제2조)

나. (병합의 경우)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사건임(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안 제3조)

다. (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론진행 중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사건임(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안 제4조)

라.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 당시이고 이후 청구취지 감축 등이 있어도 변경되지 않음(안 제5조)

마.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표시) 고등법원 관할 사건은 기록표지 좌측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고액(지름 2cm)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표시함(안 제6조)

바. (송달료의 처리) 제1심 법원이 기록 송부를 잘못하여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송달료는 국고로 처리함(안 제7조)

### 3.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안

붙임과 같음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등법원 관할사건) 다음 각 호의 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및 이에 대한 재심·준재심 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본안사건이 없는 집행사건이나 공시최고사건은 제외)

제3조(병합의 경우)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예컨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

송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고등법원 관할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5조(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1호 참조),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 병합된 청구, 본·반소나 본소·참가소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표시) 민사단독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병합·반소제기 등에 의하여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기록표지 좌측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고액(지름 2cm)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그 사건이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을 표시한다(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7조(송달료의 처리) 제1심 법원이 기록 송부를 잘못하여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송달료는 국고로 처리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고등법원 관할사건 표시 기재례

[별지] 고등법원 관할사건 표시 기재례

년 질 호

전 책중 책

기 일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margin-right: 10px;"> <b>고액</b> </div> <div> <b>〇〇지방법원</b>  <b>민사제1심소송기록</b> </div> </div>		
		사건	20 가단	단  독
	원고			
	피고			
완 결 공 략	담 입	과 장	재판장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578